

광주·전남 코로나19 심상치 않다... ‘조용한 전파+산발 감염’

광주 한달 새 300명·전남 이달 들어 130명 신규 확진
 가정의 달 가족간 확산...학교·유흥주점·콜센터 ‘빨간불’
 방역당국 “가벼운 증상에도 지체없이 선별진료소 가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확산이 현실화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누적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지대인 유흥업소와 콜센터는 물론 일선 학교와 공공기관, 장례식장 등으로도 바이러스가 퍼져 산발적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33명, 전남은 1185명으로, 광주·전남 합쳐 3718명에 이른다. 광주 확진자의 94%, 전남 93%는 지역 내 감염 사례들이다.

광주에서는 최근 한 달새 300명이 확진됐고, 한동안 잠잠하던 전남에서도 이달 들어 13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밀접착자도 분류돼 자가격리중인 인원만 광주 2500여 명, 전남 1700여 명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로 늘고 있어 추가 확산과 사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전남 하룻동안 검사 인원만

7994명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담양 지인모임과 북구 호프집, 체육회, 보험사, 사우나, 어린이집 등에 이어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유·초·중·고등학교, 장례식장 등지에서 확진자가 이어졌고, 전남에서는 관공서와 유흥주점, 요양병원, 백화점 등에서 집단 감염 또는 산발적 n차 전파가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달 23일 이후 광산구 S고와 북구 K여고, 남구 S중, 서구 H초 등 10개 유·초·중·고에서 학생과 교사, 외부 강사 등 25명이 확진됐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n차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6살 어린이를 비롯해 일가족이 모두 감염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달 들어 여수에서만 유흥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57명이 연거푸 확진되면서 고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고흥에서도 유흥시설과 군청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와 콜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 임시폐쇄가 이어



11일 전남 여수시청 본청사 주차장에서 시청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시는 국동임시별관청사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곳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시 산하 공무원 2300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졌고, 자가격리 도중 또는 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0여 개 감염경로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피로감과 긴장도 날로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소리없는 전파로, 확진자 발생 초기 감염 경로를 파

악하기가 쉽지 않아 초동 방역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중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 3명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는 안갯속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코로나19 증상 이후 제때 검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벼운 인후통이나 기침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안돼요”...오늘부터 벌금 10만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앞으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헬멧 등 안전장구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11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을 강

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사망)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의 추이를 나타낸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

동 킥보드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헬멧 착용도 의무화
 정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단속 및 홍보 병행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구분	개정 도로교통법	5월13일 시행
보도통행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무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만원 (보호자)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속성발효 범칙금 15만원
안전 도로교통법 유지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내 삶이 행복한 **광산**

행복으로 路(로)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개인 (주민)



-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이렇게 신청하세요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